

宋 “文이 北반응 기다리자고 해”... 文측 “북한팔이 그만하라”

‘송민순 문건’ 논란 확산

한국당·국민의당 가세
문재인 후보에 십자포화
文측 반박 문건 3건 공개
송 前 장관 형사고발기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과 관련된, 이른바 ‘송민순 문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며 문건을 지난 21일 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의 기권 결정을 내릴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문 후보는 북한에 직접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봤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해외정보망이 아니라 직접 북한 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제2의 NLL 북풍 공작’,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고, 국가정보원의 관련 문건 공개 요구와 함께 다음 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송 전 장관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섰다.

문 후보 측 박공은 공보단장은 전날인 22일 범보수 진영을 겨냥, “북한팔이로 부릴을 꿈꾸는 국정농단 세력에게 경고한다”며 “더는 북한팔이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11월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다.

우선 11월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



비핵화구상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비전 선언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광화문 미래선언 행사에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두 손 들어 지지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한국 주도로 비핵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안철수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11월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끼리 보고하셨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끼리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장관은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련 하에 논의가 진행됐으며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김경수의 해명과 관련 “11월 20일 당시 청와대에서 관계관이 유엔주재 대표부에서 온 (한국의 인권결의안 찬성에 북한이 극렬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대로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 실장(문재인)은 ‘남북체질의 반응이 중요하니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며 자신이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청와대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 의논이 있는 뒤 약 1시간 후 북한의 메시지(결의안 찬성에 반대하는 내용)가 서울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됐고 그때 기권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16일 회의가 아닌 20일 기권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송민순 문건 파장이 ‘주적 개편’ 논란보다 더 파급력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송 전 장관 대선 코앞에 두고 공개한 정치 색 배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역풍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북한에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보공약·미래비전전략 발표... 대선 중반 표심잡기

대선레이스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양당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일 안보공약과 미래비전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후보=문 후보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실행하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시행동’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략인 김제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 증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며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안 후보는 이날 “보수의 대통령, 진보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민과의 약속, 미래비전선언’ 연설을 하고 “한국 정치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양극단 계파패권세력은 몰락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이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34명 사드 배치 찬성” “5명 반대 입장 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인 주승용 원내대표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당론과 관련, 소속 의원 39명 중 34명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명의 의원 중 5명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당론 변경은 아직 안 됐지만, 당의 입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 안 후보가 찬성하는데 당론이 반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론 변경을 위한 의총을 열려고 하지만 선거운동 때문에 의총 성립이 어려워 서면을 통해 39명의 의원 전원에게 물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4일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안 후보 부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밝히자며 교문위 소집을 제안했다”면서 “저는 교문위 소집 제안을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한노위를 함께 열어 ‘제2의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 88%가 염원하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 개혁입법 대선 전 국회 합의 통과를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대선주자들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우연히도 올해는 1894년 7월 27일 시작된 갑오개혁(甲午改革) 12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개혁의 실패는 식민지 전락과 민족 분단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원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돌파 이후 이에 걸맞은 제도 개혁이나 행정 혁신이 없어 한국 사회는 몸집은 커졌는데 속은 과거 그대로 있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은 많지 않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대는 갈수록 빨라지고 성장 잠재력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5000년 역사 속의 뿌리 깊은 적폐를 일소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국가대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이상은 동아일보사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째, 갑오개혁(甲午改革) 12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전문가 100명과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또다시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역사적 현실진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과제로 국가대개혁을, 국가대개혁의 지향점으로 제도개혁과 행정혁신을 지목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3년이 지난 오늘 ‘이게 나라냐’는 촛불민심과도 부합됩니다. 그 후 시민사회는,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한일도 없이, 촛불민심에 무임승차하여 승자독식의 패거리정치 대권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갑오개혁(甲午改革)의 전야와 다름없는 현 난국에서 개혁입법 하나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대선을 치른다면 우리 국민은 또 다른 '5년 내전'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가개혁을, 국가개조를 외치며 오다가 이제 유력 대선주자들은 적폐청산을 또 외치고만 있습니다. 대선주자 TV토론에서 보여준, 유력 대선주자들의 적폐 논쟁은 또 다른 '5년 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적폐세력으로도 매도당할 패자나 적폐세력에 정권을 빼앗긴 패자가 심사리 승복할 리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두 주자들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실패의 반사이익이며 1600만 촛불민심의 등에 무임승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친박세력 또한 자기 정부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회색할 것입니다. 이를 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5년 내전'이 명확히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뜩하고 허무하고 잔인합니다.

그렇다면 1600만 촛불은, 깨어있는 5000만 국민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편을 써야 합니다. 첫째로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 개혁입법으로, '권력분립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둘째로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입법으로 영미식 '정비적순해배상제' 도입을, 셋째로 국민기본권 보장 개혁입법으로 국가의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3대 개혁입법을 대선 전 국회 합의통과를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바로 즉시 명명해야 합니다.

2. 대선주자들은, 시대적과제인 '국가대개혁'을 외면한 채 국가 채무가 사상최고인 1433조원을 넘었는데도 눈앞의 표민 의식해 '현금 퍼주기' 식 호객행위만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킨, 이명박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률,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장밋빛 청사진), 박근혜정부의 '474 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장밋빛 청사진)이 실패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더욱이 국가 채무가 사상최고인 143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선 주자들은 거리와 시장에서, 노인복지·아동수당·청년수당 등으로 눈앞의 표민 얻기에 급급해 '현금 퍼주기' 식 호객행위만 일삼고 있습니다.

3. 복지공약 복지는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그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영미식 '정비적순해배상제' 그리고도 소수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소송제' 등 3대 개혁입법 즉, 3개의 기둥 축이 세워져야 합니다. 복지공약 복지는정 나아가 재벌개혁, 4차 산업혁명 준비 등은 3개 기둥 축이 먼저 세워진 다음의 논의 과제인 것입니다.

복지 논쟁의 경우, 상류의 특을 막아 놓고 하류로 떠내려 온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지금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복지공약을 재벌개혁을,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외치고만 있습니다. 길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냥낙구에 불과합니다. 747 공약이, 474 공약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는 1만 달러 시대에 입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 선진국의 문턱에서 10여년이 넘도록 주저앉고 있다”고 진단해 왔던 것입니다.

4.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일 때 3대 개혁입법 합의 통과를 명명하여 합의과정에서 정치연합이 이뤄져 차기 정권의 안정성도 사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개혁입법 대선 전 국회 합의통과 과정에서 정치연합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차기 연립정부를, 집권세력의 정파적 선택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인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시킬 수 있어, 인사청문회 파행 등 온갖 정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차기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국회 합의를 통해 3대 개혁입법이 시행되면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경제성장동력'도 확보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법과 제도도 정비되고 사회적 신뢰가 복유립 수준만 확보된다면 매년 경제성장률 4%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그간 누누이 회자된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최근 대선주자들을 찾아가 같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현금 퍼주기' 식 공약에 앞서 마땅히 3대 개혁입법을 대선 전에 이미 합의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입니다(세상 한 내용은 광주일보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23면 필자의 기고문 참조).

6.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잃었던 갑오개혁(甲午改革) 전야와 똑같아서 광주인이, 호남인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공약은 국가대개혁 등 시대대정 시대적과제를 담아내야 하고, 총선은 중간평가 결과를 담아내야 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 선거공약은 시민 생활과 밀착된, 노인복지·장애인복지·유아수당·청년수당 등을 담아야 한다고 볼 때, 이번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특히나 나라를 잃었던 갑오개혁(甲午改革) 전야와 똑같은 난국에서마저도, 이렇다면 광주인이 호남인이 나라를 잃기 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호남인의 의병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우리 지금 바로 즉시 1,000원씩 의병독립자금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에 1600만 의병 다시 켜시다.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 낸 후, 후사를 정치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은, 국민의 안심과 국가의 인위는 덮어두고, 승자독식의 패거리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대권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120여 년 전 나라를 잃었던 갑오개혁(甲午改革) 전야와 한치의 오차가 없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인의 의병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우리 지금 바로 즉시 1,000원씩 의병독립자금을 모아 중앙지는 물론 전국 지방일각까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촛불을 다시 켜들도록 앞장서시다.

그리되면 대선주자들은 여의도 국회로 들어가, 3대 개혁입법 국회 합의통과에 머리를 맞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연합 나아가 차기정부 수립을 위한 조약에도 머리를 맞출 안정적 차기정부를 구성해 내는데 다가가 것입니다. 시장에서 길거리에서의 호객행위가 아닌 이 합의 통과 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따라서 1,600만 촛불이, 명예혁명의 완결성이 확보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광주인, 호남인의 기능과 역할일 것입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민족 대한민국을 이 난국에서 구해내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 놓시다.